

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

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

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,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 ”

윤석열 대통령



“ 규제합리화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경제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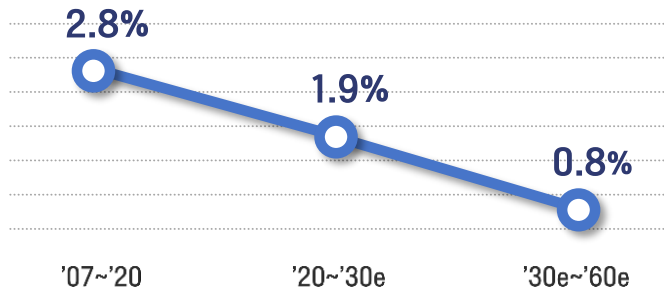
한덕수 국무총리



1 추진배경 : 왜 규제혁신인가?

잠재 성장률 하락

OECD 38개국 중 꼴찌 (OECD, 21년)



☑ 잠재성장률 = α · f(노동·자본)

총요소 생산성

= 기술, 혁신, 노사관계, 법, 규제...etc

☑ 규제혁신

→ 민간의 혁신, 효율적인 시장경제 작동

→ 총요소 생산성 제고

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위해
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이 긴급요

2 | 그간의 추진경과

✓ 추진체계



규제개혁위원회 [행정규제기본법]

- ▶ 대통령 소속 위원회(국무총리·민간 공동위원장)
- ▶ 규제정책 심의·조정, 규제심사·정비

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

- 규제위 자문위원회
- 민간 전문가 120명 구성
- 신산업 규제애로 해소



국무조정실 [정부조직법]

- ▶ 범부처 규제개혁 기획·총괄
- ▶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

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

- 대한상의·중기중앙회와
공동 운영
- 기업 규제애로 해소

규제개혁 신문고

- 온라인 기반 규제애로
건의·해소

2 | 그간의 추진경과

추진내용

규제 심사·정비



신설·강화
규제심사

...

규제개혁위원회는 부처의 모든 신설·강화 규제 심사



과도한 규제 철폐·개선 권고

* '21년 1,129건 심사, '17~'21년 중요 규제는 3.7%



규제비용
관리제

...

규제 신설 강화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
기업 등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순비용 산정('16년 도입)

* 규제연구센터(KDI, 행정연구원)에서 규제영향분석, 규제순비용검증 등 지원

2 그간의 추진경과

추진내용

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·운영



규제샌드박스

...

기존 규제체계에서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, 실증특례 부여

* 6개분야 : ICT융합, 산업융합, 혁신금융, 규제자유특구, 스마트도시, 연구개발특구

→ 688건 승인(투자 6.4조원, 고용 7,400여명)



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

...

미래 신산업 전개 양상을 예측하여 미리 규제이슈 발굴, 로드맵 마련

→ 7개 분야* 274건 개선

* 자율주행차, 드론, 수소차·전기차, VR·AR, 로봇, AI, 자율운항선박



네거티브 규제시스템

...

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신산업·신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

네거티브 규제체계* 로 전환 * 네거티브 리스트, 개념정의 확대, 분류체계 유연화 등

→ 583건 개선

01



덩어리 규제 개선 미흡

기업활동에 큰 영향을
미치는 복합 규제
개선 부족으로 경제활력 제약

02



갈등규제의 주도적 해결 부족

신산업 확산에 따른
신구산업·업역 간 침해한
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미약

03



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 미흡

민간 규제건의 검토시
수요자 시각에서
규제 개선 노력 부족

04



규제관리 시스템 사각지대

전체 신설·강화 규제 중
일부만 중요규제 심사,
규제개선 이후 사후관리 부족

4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목표

민간의 자유와 창이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
정부에 의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

추진전략

01



덩어리 규제의
전략적 개선

추진체계

퇴직공무원, 경제단체,
연구기관, 정부가 합동으로

[규제혁신추진단 운영]

02



민간 주도 현장
규제애로 해소

민간의 규제건의를
규제심판관이 검토·해결하는

[규제심판제도 신설]

추진기반

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업그레이드

- 규제샌드박스 플러스+ (제도 전면개편)
-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확대

규제관리 시스템 혁신

-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: 스마트 규제
- 엄격한 규제품질 관리 및 규제문화·형태 개선

강력한 추진체계 구축

-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,
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

원칙

▶ 각 부처의 자율과 책임하에 전방위적 규제혁신 추진

4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✓ 추진체계



- ▶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(사무국 : 국무조정실)
- ▶ 대통령, 총리, 관계부처 장관, 지자체, 경제단체, 전문가 등 민관 참여

신설
규제혁신추진단 단장 : 총리

퇴직공무원, 연구기관, 경제단체 등
민관 합동((200명)으로, 국무총리 소속 추진단
설치 (2개 분과, 10개팀 구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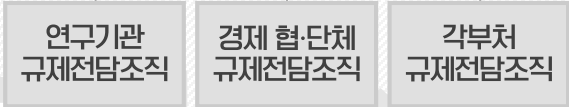
규제개혁위원회

정부 부처

국무조정실

신설
규제심판부

민간전문가, 현장활동가로 규제심판관 구성(100여명)
→ 건의 건별로 규제심판부 구성(Pool제)



4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01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

- 민·관·연 합동으로 국무총리가 단장인 '규제혁신추진단' 구성,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
- △퇴직공무원 △연구기관 △경제단체 등 참여 → 정책경험·전문성·현장성을 결합, 규제개혁 역량 결집

규제혁신추진단 운영방안

조직

국무총리 직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
(단장 : 국무총리) 설치

역할


덩어리
규제 발굴


개선방안
검토·도출


사후관리
점검

구성

약 200명

퇴직
공무원
150명

+

연구원 및
경제단체
50명

- ▶ 경제 및 행정사회 2개 분과, 분야별 총 10개팀
- ▶ 경제단체·연구기관은 규제혁신추진단에 인력 파견
- ▶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가용한 공공·민간 소기관이 규제혁신에 참여



4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01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

01
과제
발굴·개선



경제단체, 연구기관, 부처 등
연계, 덩어리 과제 발굴

과제 주관부처에서 자체
해결 노력 → 필요시
규제혁신추진단 지원

02
과제 개선
지원



규제혁신추진단에 덩어리
규제별 전담팀을 구성

규제비용, 국제기준 등을
종합검토 → 개선안 마련

03
개선안
논의·추진



추진단장(총리) 주재
회의에서 개선안 마련

추진단에서 해결이 어려운
경우 → 규제혁신전략
회의에서 논의·최종확정

04
집행
점검



소관부처 책임하 후속조치
이행

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
점검·보완

4 |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02 | 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: 규제심판제도 도입

… 기업·국민의 현장 규제애로를 중립적인 ‘규제심판부’에서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‘규제심판제도’ 신설



민간 중심
규제심판부 구성

민간 전문가, 현장 활동가 등으로 규제심판관(100여명)을 구성
→ 건의 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규제심판관을 배정(pool제 운영)
규제심판부 구성



수요자 중심
건의 검토

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, 균형적·중립적 시각에서 규제 건의 검토
규제 심판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이
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 확대



부처의 규제
입증책임

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규제 소관 부처가 증명
→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, 해당 규제 폐지 또는 개선 권고

4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02 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 : 규제심판제도 도입

4단계의 면밀한 검토 과정 설계



4 |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03 |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

☑ 규제샌드박스 플러스+



- ▶ Top-down으로
갈등규제 정책실험



- ▶ 심의기한(90일) 설정,
법률 개정계획 수립 의무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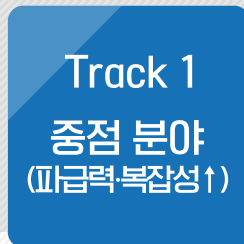
- ▶ 유사 특구간 협약체 구성,
시너지 효과 창출

☑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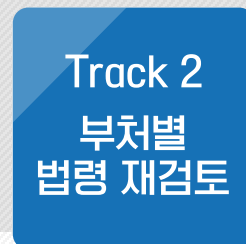
파급력·복잡성 고려한 투트랙 방식 추진



- ▶ 원칙, 방법, 예시 등
지침마련(국조실법제처)



- ▶ 주무부처 책임하 신산업 등
핵심분야 중점 추진



- ▶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,
소관부처 책임하 추진

4 |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04 | 규제관리시스템 혁신

✓ 규제혁신 행정의 디지털 전환 : 스마트 규제

규제정보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
규제 신설·집행 등 규제행정 서비스 모델 혁신



신설

법을 조문을 디지털화하고 AI 등을 적용, 신규 규제 도입시
유사·중복 규제 검증 및 규제영향분석 고도화



집행

행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요소에 정부 규제역량을 집중, 행정 효율성 획기적 개선



규제 정보

디지털 규제 내비게이터 : 복잡·다양한 규제를 간단하게 도식화(Mapping)한 규제지도 제공
메타버스 활용 : 실제 적용규제를 사전에 인지·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

4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04 규제관리 시스템 혁신

✓ 엄격한 규제품질 관리

중요규제 심사 강화

규제비용 연간 100억원 이상 등
중요규제는 심층 심사

심층심사 대상인 중요규제 범위 확대

* 규제비용 연간 100억원 이하라도,
경제·사회파급효과 큰 경우 등

재검토기한 의무설정

신설·강화 규제에 대해 존속 기한
또는 재검토 기한 설정
* 경제규제의 약 7%만 설정('21년)

모든 경제분야 규제에 재검토기한(3년)
설정 → 기한 도래시, 폐지·개선 검토

규제비용 획기적 감축

신설 강화 규제 준비비용 산정,
부처별로 단순 집계

'One-In, Two-out(200%)' 추진
매년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 목표 설정

✓ 규제행정 문화·행태 개선

규제혁신을 위한 인사체계 개선

감사 면책과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**인사체계 전반 개선**,
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규제혁신 행정문화 조성

실효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**현장중심·유연한 행정문화**
확산 중점 추진, 규제집행시 **재량권의 합법적 행사 근거 마련**

4 |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전략

05 |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



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

개요

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비상설 회의체

기능

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로서 주요 규제혁신 과제 논의

구성

대통령, 총리, 관계부처 장관, 지자체, 경제단체, 전문가 등 민관 참여



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

위원 구성

전문적인 활동·경력 중심으로 민간위원 구성 개선, 전문성·다양성 제고

기능

위원회 본심사 대상(중요규제) 확대, 신설·강화규제는 물론 기존규제 정비 기능 강화

연구 기관

규제영향분석 등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규제연구센터 역할 및 역량 강화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